

원서전달

‘격차사회론’의 시사점

—
정진성

* **지은이 | 정진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쓰쿠바대학 대학원 역사·인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배재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일본경제론 담당)로 있다. 주로 일본 근대의 경제사·경영사, 일본 재벌사, 일본 석탄산업사 등을 연구 주제로 삼아 왔으며, 향후 일본근대경제사의 통사적 정리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연구할 계획에 있다. 주요 저서로 『일본인의 경제생활』(공저), 『일본의 기업과 경영』(공저)이 있으며, 역서로는 『일본경영사』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 「재벌비판을 통해서 본 일본의 반기업정서」, 「高度經濟成長期の石炭産業調整政策：生産維持と雇用調整を中心に」 등이 있다.

'격차'는 최근 10여 년간 일본사회의 핫 이슈의 하나였으며 지금도 '격차'를 둘러싼 논쟁은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다. '격차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격차를 둘러싼 논의가 양산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격차'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때문일 것이다. 같은 격차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하는 바가 빈곤문제인지, 소수 역만장자의 존재인지, 경쟁의 격화 그 자체인지, 세대 간 격차의 계승인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의 사용이 격차 문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차문제에 대한 그릇된 처방전을 제시하게 만든다. 혼란스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 문제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를 리뷰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격차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橋木俊詔)와 오타케 후미오(大竹文雄)의 저서들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의 격차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그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치바나키와 오타케는 모두 경제학자이며 격차의 문제를 우선 경제적인 격차, 즉 소득의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 두 사람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격차문제를 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서평에서 다루는 격차문제도 소득격차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격차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을 미리 말해둔다.

서평의 대상으로는 다치바나키의 『일본의 경제격차』¹⁾와 『격차사회』²⁾, 『일본의 빈곤연구』³⁾, 오타케의 『일본의 불평등』⁴⁾, 『격차와 희망』⁵⁾을 선택했다. 1998년에 이와나미문고로 간행된 다치바나키의 『일본의 경제격차』는 ‘1억 총중류사회’로 인식되어 왔던 일본사회의 ‘평등신화’를 정면에서 반박한 문제작으로 이 책의 발간 이후 일본사회에서 ‘격차’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치바나키는 2006년에 다시 『격차사회』를 같은 이와나미문고에서 출판하여 전작의 출판 이후에 제기된 여러 논점에 대해 다시 일본사회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격차문제에 대한 자신의 처방전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빈곤연구』는 빈곤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서이다. 이 저서는 『격차사회』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발간되었는데, 『격차사회』에서의 빈곤에 관한 부분에는 『일본의 빈곤연구』의 내용 일부를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다치바나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타케는 2005년에 출판한 『일본의 불평등』에서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격차의 확대는 주로 고령화 등에 따른 ‘겉보기’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했다. 오타케는 다치바나키와 함께 분배문제의 권위자로서, 『일본의 불평등』은 닛케이(日経)경제도서문화상, 산토리학예상, ‘에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격차와 희망』은 저자가 경제신문이나 경제잡지에 실었던 짧은 칼럼을 수록한 것이다. 『일본의 불평등』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서적으로서 주로 격차라는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격차와 희망』에서는 저자의 가치관이나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다치바나키와 오타케의 저서 내용 전체를 개설하는 형식을 취하

1) 橋本俊詔, 『日本の経済格差：所得と資産から考える』, 東京：岩波書店, 1998년. 이 책은 2001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서평은 기본적으로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지음, 이병진 옮김, 『일본의 경제격차：소득과 자산으로 생각한다』, 소화, 2001).

2) 橋本俊詔, 『格差社会：何が問題なのか』, 東京：岩波書店, 2006.

3) 橋本俊詔·浦川邦夫, 『日本の貧困研究』, 東京：東京大学出版会, 2006.

4) 大竹文雄, 『日本の不平等：格差社会の幻想と未来』, 東京：日本経済新聞社, 2005.

5) 大竹文雄, 『格差と希望：誰が損をしているか?』, 東京：筑摩書房, 2008.

지 않고 두 사람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처럼 격차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일본사회의 격차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복합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가?

다치바나키는 80년대 이후, 특히 버블 형성과 붕괴과정에서 일본의 경제적 불평등도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한편, 오타케는 경제적 불평등도 확대의 상당 부분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겉보기'(みせかけ 또는 みかけ)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타케의 주장은 일본정부에서도 수용하여 내각부는 2006년 1월 격차 확대는 일본이 고령화 등에 의한 '겉보기의 문제'라는 견해를 공표하였다. 같은 견해는 역시 내각부가 매년 발행하는 『경제재정백서』(經濟財政白書)에서도 반복하여 주장되었다.⁶⁾ 이러한 인식 차이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보기로 한다.

다치바나키는 『일본의 경제격차』에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첫째, 일본의 불평등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둘째, 일본의 불평등도는 미국보다도 크다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정도”⁷⁾의 사실을 지적하여, 일본의 ‘1억 총중류사회’라는 허상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지적 중, 불평등도가 미국보다도 크다는 주장에는 통계 취급상의 미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치바나키의 주장은 일본의 『소득

6) 『경제재정백서』에서 격차의 문제가 별도의 항목으로서 처음 논의된 것은 2006년판 백서이다. 이후 2010년판 백서까지 2008년판을 제외한 모든 백서가 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경제재정백서』에서 격차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6년판 제3장 제3절 「가계에서 본 경제적 격차」, 2007년판 제3장 제4절 「경제성장과 격차의 관계」, 2009년판 제3장 제2절 「임금·소득격차와 재분배효과」, 2010년판 제2장 제2절 2 「소득분배와 개인소비」.

7) 번역본에는 “アメリカの所得分配不平等よりも、当初所得で見てわが国のジニ係数が高いという事実は、にわかには信じ難いほどの不平等度である”을 “과세 전 소득에서 볼 때 일본의 지니계수가 (중략) 미국보다도 높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일본의 경제격차』, 14쪽)라고 오역하고 있다. 위 문장은 “과세 전 소득에서 볼 때 일본의 지니계수가 (중략) 미국보다도 높다는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정도의 불평등도이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재분배조사』의 당초소득으로 계산한 1989, 1992년의 지니계수가 1989년의 미국의 지니계수보다 높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당초소득'과 미국 통계에서의 소득 개념이 다른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다. 즉 '당초소득'은 공적연금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일본의 「가계조사」나 미국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라는 소득조사는 공적연금을 소득으로 계상하고 있다. 만일 고령화가 진전되어 공적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당초소득' 기준으로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된다. 오타케가 '당초소득'을 「가계조사」의 소득개념에 맞추어 수정한 후에 지니계수를 계산한 것을 보면 그 수준은 크게 낮아진다.⁸⁾

다치바나키는 나중에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였지만, 2006년 출간한 『격차사회』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로 측정된 일본의 불평등도는 1990년대 후반에는 명확히 유럽 국가의 수준을 상회하여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타케는 최근 시점의 국제비교를 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판 『경제재정백서』는 역시 OECD의 자료를 이용하면서도 2000년을 전후하는 시점에서의 일본의 불평등도는 OECD 국가의 평균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서 중상위 그룹 내에서는 가장 적은 편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치바나키의 두번째 주장은 일본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 즉, 소득 및 자산에서의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격차』는 「소득재분배조사」와 「가계조사」에서 계산한 지니계수의 추이(『일본의 경제격차』의 <표 1.1>과 <그림 1.2>)를 통해 소득격차가 확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격차사회』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득격차가 확대하고 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상기의 두 조사 외에 『전국소비실태조사』로 계산한 지니계수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니계수 외에 빈곤율, 생활보호수급자 및 가구 수, 저축률 제로 가구 수, 자

8) 1992년의 경우, '당초소득'의 지니계수는 0.41990이나 수정한 당초소득의 지니계수는 0.3642로 낮아진다(大竹文雄, 『日本の不平等』, 9쪽).

기과산신청 건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빈부격차가 확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오타케는 『일본의 불평등』에서 소득격차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데, 그 역시 지니계수 등으로 추정하는 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상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 경제 전체의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타케와 다치바나키 사이에 차이는 없다.

다치바나키와 오타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통계상으로 나타난 불평등도의 확대가 실질적인 불평등도의 확대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의사(疑似) 격차’의 확대를 의미하는가에 있다. 오타케는 통계상으로 관찰되는 경제 전체의 불평등도 확대는 주로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및 가구 크기의 변화(또는 가족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실질적인 개인 간 소득격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두 요인에 의해서 통계상으로는 나타나는 격차는 ‘의사격차’, 즉 ‘겉보기’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제 전체로서의 불평등도에는 명확한 상승 트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간 임금격차나 연령 간 임금격차, 연령 내 임금·소득격차를 분석하면 반드시 장기적 상승 트렌드가 관찰되지는 않는다”라며, “그룹 간 소득격차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일본 전체의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면, “그 원인은, 그룹의 세어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에서 장기간 트렌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룹 세어의 변화는 인구고령화이다. 그렇다면, 인구고령화가 진행된다면 그만큼 경제전체의 불평등은 확대되어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일본의 불평등』, ii쪽)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고령자그룹 내의 소득격차는 일반적으로 청장년층 내의 소득격차보다 더 크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자그룹의 세어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전체의 소득격차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오타케가 현재의 일본사회에서 격차확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타케는 현재의 소득만으로 격차사회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진정한 소득격차는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논해야 한다고 한다. 생애소득의 추계는 곤란하기 때문에 생애소득 격차의 대리료

서 소비격차를 추계해 보면, 젊은 층에서 소비불평등도의 확대가 관찰되며, 이것은 현재의 소득격차에 나타나지 않는 생애소득격차의 확대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일본의 불평등』, 24~25쪽).

현재 소득격차를 둘러싼 논의는, 통계상의 격차확대가 주로 고령화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 특정한 그룹, 예를 들면 연령계층(젊은층 혹은 고령층) 내에서의 격차확대의 증가, 또는 가구 형태(단독가구나 기타가구 등)나 가족 형태에 따른 격차확대의 문제 등으로 확산 내지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격차확대에서 빈곤문제로

다치바나키도 『격차사회』에서 통계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인으로서, 고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라는 요인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31쪽). 그러나 고령화 요인에 의한 격차확대를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생애소득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소비격차에 대해서도 별다른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¹⁰⁾ 그러면서 그는 2006년에 발간된 『격차사회』에서 중심 테마를 ‘격차 확대’에서 ‘빈곤’의 문제로 슬쩍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치바나키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2007년 전후부터 격차를 둘러싼 논의의 초점은 격차확대에서 ‘워킹 푸어’¹¹⁾나 빈곤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9) 예를 들면, 시라하세 사와코(白波瀬佐和子)는 격차확대의 요인으로서 고령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연령별 및 가구형태별로 그룹을 나누어 각 그룹에서의 격차확대 여부를 분석하여, 표준적인 가구 이외의 가구에서 격차가 확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白波瀬佐和子, 「格差論が見過していること」, 神野直彦·宮本太郎 編, 「脱「格差社会」への戦略」, 東京: 岩波書店, 2006).

10) 『일본의 경제격차』에서 소비, 생애소득의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만 분석은 하고 있지 않다(84~86쪽).

11) ‘워킹 푸어’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에 불을 지른 것은 워킹 푸어를 다룬 NHK의 특별 프로그램이었다(NHKスペシャル 『ワーキングプア: 働いても働いても豊かになれない』, 2006년 7월 23일 방송. NHKスペシャル 『ワーキングプアII: 努力すれば抜け出せますか』, 2006년 12월 10일 방송).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2007년 6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NHKスペシャル 『ワーキングプア』取材班, 『ワーキングプア: 日本を蝕む病』, 東京: ポプラ, 2007).

다치바나키는 “고령화가 진전하고, 혹은 단신자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고령단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고령단신자라고 하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 “생활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사람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겉보기’로 무시할 수 있는지”(『격차사회』, 32쪽)를 문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격차사회』는 빈곤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해 발간된 『일본의 빈곤연구』는 제목대로 빈곤문제에 초점을 맞춘 노작으로서 빈곤의 역사, 개념, 현상, 원인, 국제비교, 정책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다치바나키는 일본의 빈곤문제의 심각함을 여러 지표(생활보호수급자 및 가구 수, 저축이 없는 가구의 수, 자기파산 신고 건수, 홀리스의 수 등)를 통해 증명하고자 했는데 그 중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17.1%에 이어 제2위라고 하는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OECD(2004)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OECD 평균은 10.7%).¹²⁾ 『일본의 빈곤연구』 제2장에서는 상대적 빈곤의 관점에서 빈곤이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근로세대 단신가구의 빈곤 수준이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것, 이들 단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고령화의 진전에 의해 원래 빈곤 수준이 높았던 단신고령가구가 전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 젊은 세대에서의 실업자,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들고 있다.

절대적 빈곤율이란 면에서도 일본의 빈곤은 심각해지고 있다. 다치바나키는 절대적 빈곤도의 지표로서 생활보호수급자 및 가구 수의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격차사회』, 17~18쪽). 그러나 생활보호수급을 지표로 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엄밀한 빈곤율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다치바나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가정 하에 각 가구의 최저생활비를 산출하고 생활보호기준 미만의 가구비율을 추계하였는데,

12) 보통 상대적 빈곤율은, 그 나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을 빈곤자로 정의하고 전 인구에 대한 빈곤자의 비율로서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빈곤율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일본의 빈곤연구』, 119~123쪽).

빈곤문제에 관해서는 다치바나키와 오타케 사이에 격차확대에 대한 인식에서와 같은 명확한 대립이나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오타케의 저서에서는 빈곤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빈곤에 대한 오타케의 명확한 관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단, 오타케는 다치바나키가 제시한 OECD 자료의 해석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 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율로서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 경우 중위소득이 높은 나라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게 된다. 또한 위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으로 계측한 지표로서 본래는 소비수준에서 빈곤율을 계측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격차와 희망』, 101쪽). 그러나 이런 지적이 일본의 빈곤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타케도 빈곤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의 격차확대 내지는 빈곤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왜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느끼는가?

오타케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통계상의 격차확대는 주로 고령화에 의한 겉보기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국민생활선호도조사」(내각부)와 같은 앙케이트 자료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수입이나 재산에 대한 불평등감¹³⁾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 상으로 뚜렷한 격차의 확인이 어려운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다치바나키는 격차가 실제로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계와 의식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가 관심

13) "수입이나 재산상의 낮은 불평등도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거의 만족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답의 비율.

을 가지는 부분은 통계자료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소득분포의 양 극단에 있는 그룹, 즉 소수의 고소득층과 홈리스와 같이 거주조차 일정하지 않은 최하위의 저소득층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격차를 과소하게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통계상의 한계를 다치바나키는 홈리스의 수라든가, 생활보호수급대상 가구 수 등의 자료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격차사회』, 20쪽, 22쪽, 25~27쪽).

반면, 오타케는 통계와 의식과의 괴리를 중요시하고 이를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불평등』의 제2장과 제5장에서 경제학적 틀에 기초하여 설계된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소득격차 및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람들의 심리, 태도를 조사했는데,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그룹, 소득격차의 확대를 느끼고 있는 그룹, 소득격차를 문제시하는 그룹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즉, 고학력자와 고소득자는 소득격차 확대를 저소득자보다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 위험회피도가 높은 사람은 소득격차가 장래에 확대될 것을 예측하고 소득격차 확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통계와 의식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로서는, 첫째, 임금·소득분포통계는 양단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충분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이 격차확대라는 시그널을 받고 있는 것은 소득격차 확대 자체로부터라기보다는 실업자나 홈리스의 증대로부터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이 소득격차의 확대를 의식할 경우, 그것은 생애소득의 격차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실업불안이나 임금제도에 의한 소득격차확대는 현시점의 소득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래소득에는 큰 영향을 준다. 결국 사람들이 각 시점에서의 소득이 아니라 생애소득을 의식하고 있다면 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통계상 현시점까지의 소득분포가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불가해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격차확대감을 민감하게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오타케는 소득의 상승과 하락이 사람들의 심리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오타케는 『격차와 희망』에서 기득권을 상실한 사람의 쇼크가 같은 정도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하는 비대칭성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라는 것이 많은 경제 실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전제로 하면 기득권을 중시하는 정책이 지지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고 있다(『격차와 희망』, 122쪽).

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가 각각의 그룹마다 다르다는 것은 격차에 대한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타케의 분석에 따르면 위험회피도가 높은 사람은 소득격차의 확대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회피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대기업의 고용자와 같은 기득권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득권자의 발언권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룹보다 강하기 때문에, 격차를 민감히 느끼는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격차확대 시정책은 기득권 옹호책이 되기 쉽다.

오타케가 실시한 이상과 같은 사람들의 심리, 태도에 관한 분석은 통계자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여 주는 한편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 발표되는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잘 보여 주고 있다. 앙케이트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을 경우, 소득격차 확대의 문제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시장원리주의)와 격차의 확대

다치바나키는 격차 확대의 요인으로서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를 들고 있다. 그는 고이즈미내각 시기의 구조개혁이 격차확대를 용인하고 규제완화나 경쟁촉진 등의 정책에 의해 그것을 조장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격차사회』, 59쪽), 그 저류에는 시장원리주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격차사회』, 63쪽). 여기서 시장원리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논리로서 철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같은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해, 다치바나키는 “자유주의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커다란 불평등이 생긴다면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일본의 경제격차』, 173쪽). 물론 그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시장원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롤즈의 공정원리를 제시한다. 즉, 하나는 모든 사람은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유의 우위성, 그리고 가장 불우한 사람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격차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일본의 경제격차』, 172쪽; 『격차사회』, 64쪽).

위와 같은 인식 하에 다치바나키는 격차시정 혹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격차사회』 제5장). 그의 처방전은 고용문제에서부터 사회보장, 지역격차, 교육격차 등의 다양한 부문에 제시되고 있는데, 기본은 교육, 사회보장, 고용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격차사회』, 211쪽). 한편 신자유주의적 진영에 가까운 오타케는 가급적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지만, 격차 및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교육의 강화, 그리고 소득재분배정책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다치바나키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오타케는 격차시정을 위한 규제완화의 재검토 내지는 경쟁제한적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 있다. 시장경쟁이 격화하면 동일 산업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게 되므로 그 산업 내부의 사람들, 즉 인사이드에게는 격차사회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인사이드 사이에는 격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참가할 수 없었던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게 된다(『격차와 희망』, 122쪽). 따라서 시장경쟁이 심화되면 격차가 확대되므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사이드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일 것이다. 실업증가나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본적으로는 불황에 따른 노동 수요의 저하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금이 충분히 저하하

면 노동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사원의 임금저하는 거의 없었다. 그 때문에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정사원의 신규 채용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신규채용은 비정규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즉 비정규직의 증대는 시장경쟁의 격화가 아니라 정사원의 기득권 유지 때문이라는 것이다(『격차와 희망』, 125~126쪽). 따라서 젊은 층이 프리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퇴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오타케는 주장한다(『격차와 희망』, 110~113쪽).

다치바나키 역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격차시정을 위해 규제완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방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일본의 빈곤연구』, 94쪽). 실제로 네덜란드는 1996년의 노동법 개정으로 양자의 노동조건의 격차를 두는 것을 중지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시킴으로써 실업률 저하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네덜란드와 같은 워크 셰어링은 정규직의 희생이 없으면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안이지만, 임금격차의 축소나 양자의 이동장벽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다치바나키가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생활보호, 최저임금, 세금 및 사회보험 제도와 같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범위에 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치바나키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경쟁의 제한을 주장하는 그룹과는 일선을 긋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격차사회를 보는 시각

다치바나키와 오타케의 저서를 검토하고 나서 우선 느끼는 점은, 일본이 격차사회인가 아닌가, 혹은 격차확대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현상 인식 내지는 정책 내용보다도, 격차란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룰 때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한 것이다. 모두에서, 격차란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격차 문제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우려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러한 자의적 해석,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처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엄격한 학문적 절차에 따른 어프로치는 불가결한 것이다.

첫째, 격차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 그리고 통계자료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다치바나키나 오타케 모두 격차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 특성, 주의점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럽지만 인상적이다. 이것은 굳이 지적할 것도 없는 경험적 학문의 출발점이지만,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거나 또는 자료의 성격에 대한 무지 및 오해에서 비롯한 격차론이 난무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둘째, 통계자료와 사람들의 일상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나타날 경우 그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다치바나키는 통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면을 다른 자료를 이용해 보완하는 방법을 취했다. 즉, 통계자료의 경우, 최하위층이나 최상위층에 관한 정보량이 부족하기 쉬운데 이러한 것을 홈리스의 숫자라든가, 고액연봉의 추이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¹⁴⁾ 반면, 오타케는 통계와 인식의 괴리를 격차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소득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있는 비대칭성, 또는 소득분포의 양극단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는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으로, 통계적으로는 격차확대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격차확대를 문제시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셋째, 이것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격차시정대책이나 빈곤대책은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되어야지 규범적 논의에서 도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규제를 대폭

14) 모리모토 다쿠로(森本卓郎)는 오타케가 이용하는 「가계조사」는 실제로는 조사에 응답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결론에는 대단히 큰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타케를 비판하고 있다(森本卓郎, 「金融資産への課税強化を」, 神野直彦·宮本太郎 編 「脱「格差社会」への戦略」, 東京: 岩波書店, 2006). 이 지적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타케의 조사가 '보통사람'이나 '행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식의 비판은 전혀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그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과학자의 태도이며 또 생산적이다.

강화한다면 당장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조건 상의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기계에 의한 대체 등이 진전되어 노동력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실업을 증대시킴으로써 오히려 경제 전체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제는 저변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확보하는 데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격차문제에 대해서 단락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엄밀한 경제학적 이론 위에 서서 격차문제 시정책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치바나키와 오타케의 격차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일본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오타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격차확대의 현상은 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겉보기’ 현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치바나키가 “내각부가 (격차확대를—인용자)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에 의한 ‘겉보기’라고 한다면 이 고령단신자라고 하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활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겉보기’로 무시할 수 있는지”라고 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격차가 진정한 격차이든 의사격차이든 간에 빈곤한 고령단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무언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단신자의 빈곤과 함께 젊은 세대에서의 소득 격차 또는 빈곤율의 상승이 관찰된다는 지적도 중요하다. 젊은 세대가 불가피하게 프리터 등의 고용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이 연령층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좀처럼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함으로써 빈곤층으로서 사회 저변에 퇴적해 갈 위험성에 대해서 다치바나키와 오타케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쟁격화가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주장은 거의가 기득권옹호론에 불과하다는 오타케의 지적이다. 오타케의 주장에 100%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격차시정 대책으로서 규제완화의 재검토나 경쟁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오타케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다치바나키도 지나친 경쟁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차시정대책으로서 경쟁제한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가 제시하는 격차시정대책은 대개가 경쟁제한정책이 아닌 소득재분배정책임에 주의해야 한다.